

‘보이지 않는 자’를 가시화하기*

— 재일한인 사회조사의 원점

김인수**

[초 록]

1970년대 이래 재일한인에 대한 사회조사는 일본 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자’가 되어버린 재일한인을 가시화하는 실천이었다. 재일한인의 비가시화는 동화정책을 표방한 일본의 국가행정에 의한 것인 동시에, 재일 2세대들이 한인사회의 주류가 되면서 발생한 현상이었다. 이 속에서 실시된 재일한인에 대한 사회조사는 첫째, 인권의 가치를 통해 일본 국가행정의 여러 사각지대를 드러내어 비판하는 의식적인 실천이었다. 둘째, 사회조사의 주체는 민단, 총련, 민투련 등이었는데, 이들에게

* 이 연구는 (財)이희건한일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이 글은 서울대학교 재일동포연구단 주최로 2018년 2월 23일(금)에 개최된 『재일한인의 주체성, 정체성, 공동체』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에서 유용한 조언을 주신 홍종욱 선생님과 심사를 맡아 진행해주신 익명의 세 분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건국대학교 아시아콘텐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주제어: 보이지 않는 자, 재일한인, 마이너리티 사회조사, 표본추출, 민단(民団), 총련(總連), 민투련(民闘連), 청년회, 혁신자치체
The Invisible, Ethnic Koreans in Japan, Minority Survey, Sampling, *Mindan*, *Jochongnyeon*, *Mintoren*, Youth Association, Reformatory Local Government

사회조사는 동포사회의 구성, 동태, 변화를 파악하여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적 실천이었다(competition of representation).

한편, 재일한인에 대한 사회조사는 마이너리티 서베이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문하는 데에 중요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다. 민단은 한국정부의 영사업무를 대항하면서 획득한 동포사회의 정보를 기초로 사회과학적인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1990년대에 전무후무한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후로 영사업무의 반환, 재일한인 인구구성의 다양화, 그리고 프라이버시 문제의 부상 속에서 경험적 사회조사는 난항을 겪게 되었고, 가시화의 제도적 조건은 더욱 악화되었다. 동포사회에 대한 표본추출 그 자체가 어려워져 마이너리티 서베이, 다시 말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현이 위기에 봉착했다.

현재 재일한인 사회조사가 맞이한 한계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본사회 속에서 재일한인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발언권을 확보해낸 점, ‘공생’과 ‘연대’의 아이디어를 제기한 점, 활동과 참여를 통해 ‘획득’되는 것으로서 민족아이덴티티를 새롭게 규정할 점 등은 중요한 성과로서 빛을 발할 것이다.

1. 문제제기

‘보이지 않는 자’(the invisible)란 누구일까? 언제 어디에나 또 바로 옆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감지되지 않는 그런 존재이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거나(coming out), 누군가 대신 말해주기(representation) 전까지는 “부재로써 존재”하는 이들과, 마이너리티(minority)로서 지시되는 이들이다. 현대사회이론 속에서는 타자(the others)의 형상으로서, 타자화의 폭력이 횡행한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근거로서 이해되는 이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자’는 이렇듯 자신이 속한 비식별역(非識別域)의 한계 속에서 그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범위와 속성을 어떻게 가늠하고 의미화해왔을까? 그리고 그러한 작업을 통해 무엇을 얻어내려

했던 것일까?

보이지 않는 자를 드러내는 일(making the invisible visible)¹⁾은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한 지식형태를 지녀왔다. 예를 들어, 법과 행정의 지배의 시선 속에서 타자/마이노리티를 식별해내는 지식, 사회운동의 실천 속에서 타자/마이노리티의 발언권을 의미화하는 지식, 역사적 전거를 통해 타자/마이노리티의 속성을 정의하거나 규정하는 지식, 사회과학의 조사 기법을 통해 타자/마이노리티 사회의 현황을 드러내는 ‘객관’의 지식 등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특히, 마이노리티를 사회조사의 대상으로 삼는 일(minority survey)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그 어려움과 한계를 토로해온 바 있다. 전지구적 이민사회의 형성으로 마이노리티 서베이의 필요성이 점점증하고 있지만 그 실행은 무척 어려운 일로 간주되고 있다.²⁾ 에스닉 마이노리티의 통계적 분류과정에서 범주화의 적합성을 둘러싸고 쟁점이 형성되는 것도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다.³⁾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사회의 타자/마이노리티인 재일한인(ethnic Koreans in Japan)에 관한 사회조사 역시 그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로부터 성립된 재일한인 집단의 고유한 역사성이 사회조사의 현장에 투영되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집단식별에 요구되는 ID의 내적 변화도 사회조사를 실행해가는 데에 있어 현실적 조건으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국제결혼과 귀화에 의한 국적의 변경, 재일(在日) 3, 4세의 증가, 그리고 일본으로의 신규이민(new comers)의 활성화에 따른 재일한인 사회 내부의 인구학적 재편은 재일한인 사회조사의 실행에서 여러 난점들을 낳았다.

1) 재일동포연구단의 일원인 권숙인 교수가 제안한 문구이다.

2) Font, Joan and Mónica Méndez (2013), *Surveying Ethnic Minorities and Immigrant Population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3) Orlans, Harold (1989), Commentary: The Politics of Minority Statistics, *Society* vol. 26 no. 4, pp. 24-25.

그렇다면 이렇듯 재일한인의 존재조건이 갖는 고유성과 제한성, 그리고 역사적 변화 속에서 그동안 재일한인에 대한 사회조사는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무엇을 초점으로 이루어져왔을까? 그러한 사회조사의 제한성, 불투명성 위에서도 끝내 발동했던 그 가시화/재현의 실행 의지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본 연구는 재일한인 사회의 여러 조직 및 단체들 — 민단(民團), 총련(總連), 민투련(民鬪連), 혁신자치체 등 — 의 사회조사 활동을 역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질문들에 응답해보고자 한다.

2. 재일한인 사회의 인구학적 변화와 위기의식

1945년의 패전/해방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 일본 국가와 재일한인 운동단체는 재일한인에 대한 조사에 열중했다. 패전 이후 일본 국가에게 재일한인의 수를 센다는 것(census)은 주권의 경계를 설정하는 일이자 국내정치의 성원권(주체와 대상)을 규정하는 과제, 나아가 재일한인에 대한 복지지출을 삭감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절약한다는 기획과 서로 연동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민전(民戰) 등 재일한인 운동단체는 재일한인 사회의 실태를 조사하여 드러냄으로써 일본 국가정책의 기만성을 폭로하는 데에 열중했다. 그리고 1950년대 중반 이후로 그 결과물이, 애초 자료생산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른바 재일한인의 북한으로의 ‘귀국운동’을 정당화하고 필연화하는 자료로써 활용되기도 했다.⁴⁾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1955년 이후로 197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 국가의 센서스(國勢調査)를 제외하고는, 재일한인에 대한 사회조사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⁵⁾

4) 김인수(2017), 「재일한인 인구 및 실업 통계의 정치적 의미」, 『사회와역사』 113호.

재일한인에 대한 사회조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것은 1970년대 후반 부터이다. 이른바 ‘재일 2세/3세’의 문제, 다시 말해 새로운 세대의 출현에 의해 재일 1세가 구축한 ‘민족사회’가 실감을 잃고 풍화(風化)될 것이라는 위기의식과, 마이너리티에 대한 일본사회의 무지 및 동화교육에 의해 점점 더 민족식별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본격화한 시대와 정확히 겹친다. 민족재생산의 위기를 알리는 징후는 언어사용(‘조선어’ 구사능력), 이름 사용(本名/通名), 혼인관계(일본인과의 국제결혼)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표출되었다.

당시 포문을 열었던 몇몇 사회조사들은 일본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재일한인의 존재를 부각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표 1] 재일한인의 가시화 시도

연번	보고서 제목	조사시기	표본구성 및 비고
1	隠された人々在日朝鮮人 (1978)	1978. 6~7.	- 교토대학의 일본인학생 102명 (임의추출) - 개별면접조사

5) 재일한인 사회조사 자료의 수집을 위해 본인은 가와사키시의 후레아이관 도서자료실, 도쿄의 재일한인역사자료관, 고베대학의 청구문고, 고베시의 아시아청년문화센터, 시가현립대학의 박경식문고 등을 방문조사했고,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각종 사회조사 자료 약 30여 종을 확보하였다. 1955년부터 1970년대까지의 재일한인 사회조사의 ‘공백’은 이들 자료를 수집해가는 과정에서 확인하게 된 사실이다. 재일한인 사회조사 자료군의 전체적인 특징에서 볼 때, 총련에서 생산한 자료는, 물론 접근에 제한이 있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발굴된 자료의 숫자가 매우 적은 편이다. 다만, 총련계열의 사회조사 자료가 극소한 까닭을 발굴/수집의 한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회조사의 실행 자체의 부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 시기는 북한으로의 ‘귀국운동’의 여파가 지속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본사회에서의 정주 및 생활에 관한 관심이 적었던 점이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볼 수 있다. 참고로, 시가현립대학의 박경식문고의 경우, 2000년대 중반에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자료를 마이크로필름의 형태로 일괄 수집해 소장하고 있다.

6) 豊中市 교직원조합의 전면적인 협력과 尼崎市 日朝問題研究會의 소개로 조사가

연번	보고서 제목	조사시기	표본구성 및 비고
2	日本の学校に子どもを 通わせている在日朝鮮人父 母の教育観に関する調査 (中間報告)(1979)	1979. 6. (하순)~ 7(중순)	- 尼崎市(兵庫)와 豊中市(大阪)의 일본 공립 소, 중학교의 재일한 인 학부모6) - 518/818 (회수율 63.1%) - 尼崎市(회화추출), 豊中市(전수조사) - 자기기입식 무기명 질문지. 담임 통해 배포, 회수
3	日本の学校に子どもを 通わせている在日朝鮮人父 母の教育観に関する調査 (最終報告)(1980)	1979. 9.	- 조사지역과 방법은 상동. 豊中市 (大阪府), 尼崎市(兵庫県)에 大阪 市(東成・生野区)를 추가 - 956/1,323 (회수율 72.5%)
4	在日朝鮮人に関する意識 調査より(1980)	1980. 2.	- 재일조선인교육연구위원회 위 원이 소속한 학교의 1, 2학년생도 - 회답수 923명(1학년 479명, 2학 년 441명) - 조사용지 배포, 자기기입

[연번 1]은 교토대학의 조선인 학생들이 같은 대학의 일본인 학생들(주로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케이트이다. 해방 이후 33년이 지났지만 일본 사회에서 재일한인들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들’로 자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사로, 재일한인 문제는 일본인들도 진정으로 생각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문」에는 “자신들(일본인)의 주변에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체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조사의 취지를 제시했다. 이 조사는 조

진행되었다.

- 7) 홍종욱 교수는 당시 재일한인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문제의식이 라기 보다는, 오히려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교육, 언어, 문화 등에서 재일 1세와 2, 3세 사이의 세대경험의 격차가 표면화되면서 재일한인이 ‘비로소’ 보이지 않게 된 상황이 발행했고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해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라고 논평했다. 필자 역시 이러한 지적에 공감한다.

사 그 자체로서보다는 일본인 학생들에게 재일한인의 처지를 알리고 이들과 접점을 찾는 데에 보다 큰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개별대화’를 진행하는 등 이채를 띠었다. 구체적으로, 일본인의 재일한인에 대한 이미지와 지식(일본체재이유, 시기, 관동대진재와 조선인학살, 창씨개명, 재일한인의 인구 수, 외국인등록증명서휴대의무 인지,⁸⁾ 생활에서의 차별, 직업차별, 감정에서의 차별, 차별의 경험 등), 재일한인의 고민에 대한 인지 여부(귀화하지 않은 이유, ‘조선어’ 사용,⁹⁾ 본명의 사용¹⁰⁾), 재일한인과의 직접적인 관계 여부(‘조선인’ 친구, 바라는 점) 등을 조사하였다.

[연번 2]는 교토대학 교육학부 비교교육학연구실(대표: 小林哲也 교수), 청구문고연구실(대표: 韓哲曦)의 공동조사 결과를 洪祥進·中島智子이 정리하여 발표한 것이다. 일본의 학교에서 “일본인 자제와 똑같이 대우한다”(1965년 문부사무차관 통달)는 원칙 하에 재일한인의 민족성과 그 존재의 역사성에 관한 교육을 배제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위한 조사였다. 일본의 초중등교육에서 재일한인 학생을 ‘일본인과 똑같이’ 다루는 바람에 일본의 학교에서 재일한인이 ‘보이지 않거나 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진단이었다([28]).¹¹⁾ 표본의 속성을 보면, 조사대상이 되는 학부모는 2세가 이미 84.9%에 달했고, 일본학교를 다녀 민족학교 체험이 없는 이들이 52.7%였다. 조사항목은, (1) 아이에 대해(교육이력, 모국어이해, 本名/通名 사용) (2) 일본의 학교에 대해(수업내용의 이해 및 의견, 통학의 이유), (3) 아이의 장래에 대해(민족적 소양, 민족의식을 가지게 하는 것, 미래에 대해), (4) 가족에 대해(가족 구성원 수, 부

8) “알지 못함”이 65.7%이었다.

9) 55.7%가 “배우지 않아도 괜찮다”고 응답했다.

10) “본명을 써야 한다”(23.9%), “아무래도 괜찮다”(73.8%).

11) 표에서 언급된 각 보고서 안의 내용을 본문 지면에서 인용할 경우 지면절약과 편의를 위해서 “[]”의 형태를 취하기로 한다.

모의 연령과 세대, 교육이력, 모국어 이해, 직업 등) 각각 질문을 구성한 형태였다. 조사의 결과, 아이가 민족교육을 받은 이력은 “없다”(82.6%), 아이의 모국어 이해는 “이해 못함”(83.3%), 이름 사용은 “통명”(93%)인 경우가 많았다.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는 “조국귀환”(1.4%),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생활”(34.1%), “귀화해도 어쩔 수 없다”(尼崎市 17.6%. 豊中市 27.7%)의 결과로, 부모들이 일본거주(‘在日’)를 전제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33~46]). 다만, 조사자들은 응답자들이 ‘재일’이란 것이 귀화나 동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귀화할 수밖에 없다’고 답한 점을 인상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51]), 이것은 마이너리티 서베이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질문지의 모호성, 응답의 제한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¹²⁾ 마이너리티는 사회 속에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적 조건으로 인해 종종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곤 하는데, 따라서 마이너리티 서베이는 응답자들의 주관적 의식을 객관적으로 측정, 지표화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번 3]은 재일한인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大阪市(東成・生野区)의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거주상황의 차이가 부모의 교육관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시도했다.¹³⁾ 표본의 구성은 아이가 조선적(朝鮮籍)이거나 한국적(韓國籍)인 가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귀화’ 가정은 제외되었지만 국제결혼가정은 포함되었다. 부모 중 2세

12) 여기에는 일본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조선인 부모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학교당 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질문항목을 단순화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연번 2]: [50~51]).

13) “밀집지역(尼崎市(兵庫))일수록 조선인 상호 간의 교류가 많고 민족적인 토양이 보존되어 있어서 ‘귀화’에 반발이 강하지만, 과소지역에서는 일본인사회 속에 섞여 거주하기 때문에 민족성을 숨기려 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연번 2]: [41])는 [연번 2] 조사 당시에 확보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가장 동포밀집도가 높은 오사카의 사례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포함한 것이다.

비율은 78.3%였고, 민족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이들이 52.1%였다. 일상생활에서 “일본어 사용”(평균 92.6%)이 많았고, 교제관계에서 “일본인이 많다”는 응답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豊中 72.2%, 尼崎 48.3%, 大阪 39.4%)([97]). 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일본 학교들이 ‘조선인 부모는 일본의 교육이 좋아서 아이를 일본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는 필요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고 ‘조선인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발상을 가지고 있지만,”([115]) 실제로는 이로써 재일한인의 교육문제는 터부시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교육현장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모들이 민족교육을 학교의 커리큘럼에 반영해야 하고 일본인 학생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이 조사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름 사용, 다시 말해 학교에서 본명(本名)을 쓰느냐 통명(通名)을 쓰느냐가 재일한인의 민족정체성을 가늠하는 대단히 유의미한 변별기준이 된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아이로 하여금 학교에서 본명을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일본사회에서는 상당한 용기와 각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일 것”이라는 조사자들의 코멘트가 담겼다([126~127]).

[표 2] 자녀의 본명·통명의 사용과 다른 지표들 간의 관계(상관도, %)

	통명	본명
1. 가정에서 조국/민족에 대해 종종/때때로 말한다.	48.5%	69.5%
2. 동포와의 교제가 많거나 (일본인과의 교제와) 반반이다.	55.1%	81.9%
3. 일본의 학교에서는 조국을 불충분하게 다룬다.	33.8%	42.8%
4. 민족적 자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	51.7%	75.4%
5. 모국어나 역사를 가르쳤으면 한다.	25.9%	59.4%
6. 장래 조선인으로 생활하면 좋겠다.	28.1%	49.3%
7. 아이가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학교에 보내고 있다.	15.3%	30.4%

[出典] 洪祥進・中島智子(1980), 「日本の学校に子どもを通わせている在日朝鮮人父母の教育観に関する調査」(最終報告), 『在日朝鮮人史研究』 No. 7(1980.12), p. 126.

[연번 4]는 나라현의 일본인 고교생의 재일한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었다. 주관단체는 高同教在日朝鮮人教育研究委員會로서, 학교에서의 한인 학생의 본명사용을 보장하고 차별적 편견에 기초한 취직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질문지는 ‘조선’에 관한 지식 — 한반도 지리, 재일한인 인구규모, 일본이주의 이유 — 과 이미지에 관한 것, 재일한인 문제를 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지 여부, 그들이 차별받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결론은 “무지가 편견을 가져온다는 사실이 일본학생들 안에서도 확인되었다”는 것으로, 보고서는 교사들 역시 자각을 하지 못했으므로 재일한인 문제를 자신들의 과제로 삼아 교육투쟁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외에, 神奈川韓國綜合教育院의 최양호(崔敷鎬)가 1978년에 「재일한국인 제2세의 의식구조 조사연구(요약서)」를 펴내기도 했는데, 일본에 산재하고 있는 한국교육원 37개소에 질문지를 배포하여 생활의식, 사회문화, 민족/국가의식을 측정해본 것이었다.

이들 조사는 대단히 제한적인 지역,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재일한인 사회가 처한 현실을 가늠해보는 동시에 ‘재일’을 전제로 일본사회 속에서 재일한인 문제를 가시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조사자료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은 해방 이후에 일본에서 태어난 이들이 일제히 성인이 된 시기로서, “내가 몸에 체현하고 있는 문화와 국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그 심각성을 더해갔고, 그 결과 “어떻게 하면 민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심화되어 ‘재일론’의 형태로 문단까지 성립해가던 시대였다. 이상적 민족자아의 상(像)과 현실 속의 자신의 모습 사이의 극심한 괴리,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재일한인 사회를 휘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앞으로의 논의에 참고하기 위해 재일한인 사회의 인구구성 변화와 관련된 몇 가지 거시지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表 1 「在日韓国朝鮮人の帰化者数」

(単位: 人)

年度	帰化数	年度	帰化数	年度	帰化数	年度	帰化数
1952	232	1978	5,362	1991	5,665	2004	11,031
1953	1,326	1979	4,701	1992	7,244	2005	9,689
1954	2,435	1980	5,987	1993	7,697	2006	8,531
1955	2,434	1981	6,829	1994	8,244	2007	8,546
1956	2,290	1982	6,521	1995	10,327	2008	7,412
1957	2,737	1983	5,532	1996	9,898	2009	7,637
1958	2,246	1984	4,608	1997	9,678	2010	6,668
1959	2,737	1985	5,040	1998	9,561	2011	5,656
1960	3,763	1986	5,110	1999	10,059	2012	5,581
1961	2,710	1987	4,882	2000	9,842		
1962	3,222	1988	4,595	2001	10,295		
1963	3,558	1989	4,759	2002	9,188		
1964	4,632	1990	5,216	2003	11,778	累計	338,787

※いずれも暦年の人数である。

[그림 1] 귀화자의 수 추이.

[出典] 在日本大韓民國青年會(2014), 『第4次在日韓國人青年意識調査』, p.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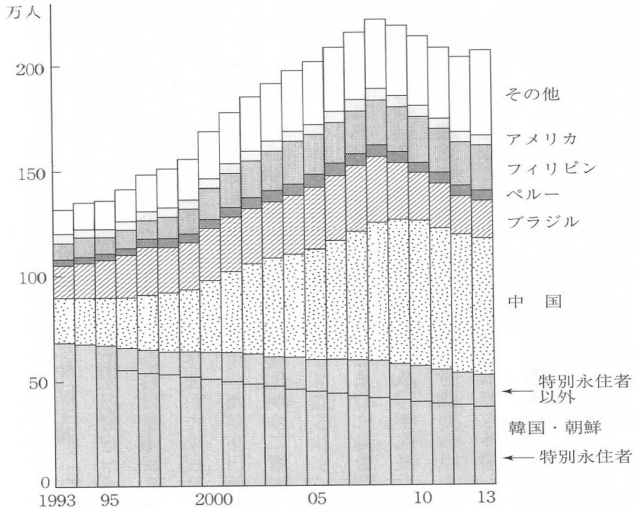
表 5 国籍別統計

年 度	韓 国 籍		朝 鮮 籍	
	人数	%	人数	%
1950.3	39,418	7.4	495,818	92.6
50	77,433	14.2	467,470	85.8
51	95,157	17.0	465,543	83.0
52	121,943	22.8	413,122	77.2
53	131,427	23.6	424,657	76.4
54	135,161	24.3	421,078	75.7
55	143,889	24.9	433,793	75.1
56	146,331	25.4	428,956	74.6
57	158,991	26.4	442,778	73.6
58	170,666	27.9	440,419	72.1
59	174,151	28.1	444,945	71.9
60	179,298	30.8	401,959	69.2
61	187,112	33.0	380,340	67.0
62	199,174	35.0	370,186	65.0
63	215,582	37.6	357,702	62.4
64	228,372	39.5	350,173	60.5
65	244,421	41.9	339,116	58.1
66	253,611	43.3	331,667	56.7
67	267,261	45.2	324,084	54.8
68	289,551	48.4	308,525	51.6
69	309,637	51.0	297,678	49.0
70	331,389	54.0	282,813	46.0

[그림 2] 국적별 통계.

[出典] 水野直樹・文京洙(2015), 『在日朝鮮人』, p. 163.

表7 在留外国人(登録外国人)数の推移(毎年末現在)



[그림 3] 재류외국인(등록외국인) 수의 추이.

[出典] 水野直樹・文京洙(2015), 위의 책, p. 210.

이 표와 그림이 지시하는 바를 개괄적으로 말하면, (1) 1970년대 후반이라는 시점은 1945년 이후 일본에서 태어난 세대가 성년세대/결혼/부모가 되는 시점이자 국제결혼과 일본국적취득자(귀화자)가 점증하면서 재일한인 사회의 인구구성에 변화가 발생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 1990년대 이후로 신규이민(한국으로부터의 신규이민, 남미로부터의 日界人, 동남아시아로부터의 노동이민)이 급증하고 있고 따라서 이전부터 구성된 전통적인 재일한인 사회의 규모가 비율상 급격히 축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일본의 혁신자치체/지방행정과 재일외국인 실태조사

재일한인 사회에 대한 이해와 파악은 일본의 행정으로서도 중요한 과제였다. 국가의 센서스는 인구집단의 규모를 측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한인 사회의 속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여러 한계가 있었다. 또, 행정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이너리티 사회 내부로부터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컸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표 3] 일본의 혁신자치체/지방행정과 재일외국인 실태조사

연번	보고서 제목	조사시기	표본구성 및 비교
5	『神奈川の韓国・朝鮮人』(1984)에 <부록>으로 수록된 外國人にたいする意識調査	1983. 4. 13. ~22.	- 1983년 4월 1일부 신규채용 縣직원 - 599/602(99.5%)
6	神奈川県内在住外国人実態調査結果概要:外国人県民と共に生きるために(1985) (*최종결과물은 金原左門, 石田玲子, 小澤有作, 梶村秀樹, 田中宏, 三橋修, 『日本のなかの韓国・朝鮮人、中国人: 神奈川県内在住外国人実態調査より』, 明石書店, 1986으로 출판)	1984. 8. 20. ~9. 30.	- 가나가와현에 거주하는 한국·조선인 및 중국인으로 1984년 9월 1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남녀. - 가나가와현에 보유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등간격에 의한 무작위추출. 추출율은 11분의 1. (*2,142명에게 의뢰장, 1,028명이 응답. 회수율 48%. 한국·조선인이 866, 중국인이 161)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질문지를 사용한 방문면접청취법 ¹⁴⁾
7	政府モニター・アンケート報告書2: 在日外国人の人權問題(1991)	1991년 1.~2.	- 1990년도 정부 모니터요원 - 회답자수: 296/300(98.7%) - 우편조사법
8	在日韓国・朝鮮人に対する生活意識調査報告書(1998)	-	- 생활사청취조사, 질적 조사

3.1. 혁신자치체와 민투련(民鬪連) 운동의 접점

일본사회에서 혁신자치체의 등장은 이색적인 것이었다. 혁신자치체가 내적 토대의 강건함보다는 고도경제성장이 담보된 속에서 한시적으로 활성화되었다가 재정위기에 직면하면서 이내 해체되었다는 식의 소극적 평가도 존재하지만, 지역의 사회운동과 행정의 결합을 추구한 독특한 모델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미를 평가할 수 있는 정치적 실험이었다. 혁신자치체의 역량은 혁신자치단체장 간의 수평적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혁신자치단체의 단체장연합은 1964년에 처음 결성되었고, 10년 뒤인 1974년경에는 약 140명의 단체장들이 참여할 정도로 활성화되었다. 도쿄, 오사카, 교토, 나고야, 요코하마, 가와사키, 고베 등의 대도시가 모두 혁신자치체가 되어 혁신정치의 벨트를 이루었다.¹⁵⁾

이 가운데 제일한인 집주지가 형성된 가와사키시는 제일한인 기독교(이인하 목사의 가와사키교회) 및 민투련(民鬪連)¹⁶⁾ 운동과의 접합을 통해 제일외국인 행정의 모범으로 불렸으며 그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해 여

14) 방문조사자로 참여한 인물의 회고담으로는, 平林久枝, 1991, 『わたしを呼ぶ朝鮮』, 社會評論社, pp. 250-255가 있다.

15) 홍성태(2002), 「일본의 혁신자치체, 그 성과와 한계」, 『이론과 실천』 신년호.

16) 「民族差別と闘う連絡協議會」. 박종석의 히타치취직차별을 규탄하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결성하여 1974년에 발족한 단체이다. 발족 당시 대표는 이인하 목사와 佐藤勝己였고, 사무국장은 배중도였다. 활동의 원칙으로서, (1) 제일한국·조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민족차별과 싸우는 실천을 한다. (2) 제일한국·조선인의 민족차별과 싸우는 각지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교류의 장을 확보한다. (3) 제일한국·조선인과 일본인이 공동투쟁해간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1970년대에는 공영주택, 아동수당의 요구, 1980년대에는 지문날인철폐, 전후보상의 요구, 이후로는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공무원 국적조항 철폐 등의 요구와 운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민단이나 총련과는 다른 제3의 민족운동단체의 설립으로 나아가 현재에 이르렀다(飛田雄一(2010), 「解題: 民鬪連」, 國際高麗學會日本支部『在日コリアン辭典』編輯委員會, 『在日コリアン辭典』, 明石書店, p. 415).

러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민투련 운동은 히타치투쟁지원운동(1970~74)¹⁷⁾에서 발원했는데, 그 핵심에서 활동했던 배중도 씨에 따르면 그 문제의 식과 활동의 기원은 이인하 목사가 설립한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esearch Action Institute for the Koreans in Japan, RAIK)에서 싹튼 것이었다.¹⁸⁾ 재일한인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민투련 운동이 내세운 방침은 지역의 생활문제에 천착하고 정치문제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재일한인 사회에서 정치적 입장을 표방하는 순간 민단과 총련과 같이 서로 분리, 대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었다. 지역의 생활문제는 한반도의 정치문제와는 결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실천을 통해 재일한인 사회운동의 새로운 길과 민족아이덴티티도 마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운동의 유형도 전통적인 재일한인 사회운동의 유형을 따르기보다는, 종래 일본사회에 팽배해 있던 부락차별문제와 그 철폐운동의 유형에 깊이 공감했다. 일본사회에서 ‘공생’(共に生きる)의 아이디어를 전면화한 것도 민투련의 기여이다.¹⁹⁾

17) 1970년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의 입시시험에서 성명란에 通名으로 기입하고 본적지를 현주소로 기입한 재일 2세 박종석이 ‘거짓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되자 이에 불복하여 히타치를 상대로 소송을 한 사건이다. 재판은 민족차별에 근거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박종석의 승소(1974)로 귀결되었다. 이후 기업이 국적을 이유로 하여 해고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여기에 ‘박군을 지키는 모임’의 형태로 다수의 재일한인, 일본인 운동가들이 결합했고, 이들은 이후 민투련운동으로 규합하였다. 당시 기성 재일한인 민족단체와 문화인들은 박종석이 이름을 속여 취직하려 한 점을 ‘동화’에 굴복한 것으로 보고 외면, 무대응으로 일관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재일한인의 존재조건, 아이덴티티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崔勝久(2010), 『解題: 日立就職差別裁判』, 國際高麗學會日本支部『在日コリアン辭典』編輯委員會, 『在日コリアン辭典』, 明石書店, pp. 369-370).

18) 조현미(2014), 『자갈투성이의 신작로: 재일한인 2세 배중도의 생애와 민족』, 책과 세계, p. 103, p. 108.

19) 배중도 씨와의 인터뷰(2018년 2월 9일, 13:00~14:30, 가와사키 ふれあい館). 김명수 교수도 “민단과 총련은 둘 다 내셔널리즘, 즉 조국의 내셔널리즘이 기본이다. 내셔널리즘이 아니라 minority로서 일본인과 ‘공생’해갈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이루어진 사회조사는 이러한 발상 위에서 실시되었다. [연번 5]는 일본의 국제인권규약 비준(1979)을 계기로 물질적 차원은 물론 마음의 차원에서도 국제화(心の国際化)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했다. 다시 말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차별을 없애는 것을 일본이 국제화해가는 시금석으로 보았다. 이를 민제외교(民際外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시민의 대표로서 재일한국·조선인을 설정했는데, 1983년 6월말 현재 기준으로, 가나가와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총 43,873명이었고 그 가운데 69%는 한국·조선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본격적인 조사결과를 담지는 않았고, 가나가와현 재일한인사의 안목 위에서 향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방침을 담은 것이었다. 조사로서는 가나가와현의 공무원들의 재일한인에 대한 관점을 탐문하는 것이 <부록>으로 실려있다. 이들의 답변은 많은 점을 생각하게 하는데, 우선 현내의 재일외국인 중 가장 많은 이들을 꼽아보라고 한 질문에 대해 “미국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 친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약 1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조사자들은 외국인이라고 하면 주로 외국어를 말한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현내에 압도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일본어로 말하는 재일한국·조선인’의 존재가 응시되지 못하고 있고, 한국·조선인의 경우 주로 통명어로 생활하고 있어서 외국인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유의미한 코멘트를 냈다. 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눈에조차 “보이지 않는 외국인”(見えない外国人)으로서 자리한 재일한국·조선인의 존재를 부각했던 것이다([188~190]).

[연번 6]은 현재까지도 재일한인 사회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사회과학적 조사로서 평가받는 기념비적인 조사이다. 비록 가나가와현이라는 지방적 단위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역사상 최초

는 민투련 사람들에게서 나왔다”고 언급했다(김명수 교수와의 인터뷰(2016년 8월 11일, 11:00~13:00, 연세대학교 인근의 某 카페)).

로 이루어진 무작위 확률추출(random sampling)의 사례였다. 표본추출이 이루어진 대장은 외국인등록원표였다. 김명수(金明秀)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 조사에 참가한 연구자들이 법무성과 외무성에 계속 타진을 하여 금지는 하지 않고 목인을 한다는 정도의 양해를 얻어 실현시킨 조사라고 한다. 현내의 민단과 총련도 이 조사에서만큼은 갈등을 내려놓고 서로 협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일외국인의 생활과 피차별의 실태를 파악하고 민족아이덴티티의 현황을 살핀 획기적인 조사로서, 다만 가나가와현이라는 장소의 제한성, 그리고 통계치의 활용이 기술통계(記述統計)에 그친 점 등이 한계로서 제시되고 있다.²⁰⁾ 여하튼 이 조사는 직업, 노동, 사회복지, 보건, 의료, 사회보장, 교육, 생활의식, 통명사용과 민족정체성, 피차별경험 등 전방위적 문제를 두루 망라하여 질문항목을 구성했다. 조사의 결과물은 사회적 차별, 학교에서의 차별, 취직차별, 용자차별에 대한 해소방법과 생활환경/복지, 외국인등록법과 관련하여 자치체에 제안하는 근거로서 활용되었다. 조사에 직접 참여한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의 논고를 통해 조사의 실상에 좀 더 접근해보도록 하자.

가지무라는 우선 ‘안으로부터의 민제외교’(内なる民際外交)²¹⁾라는 발상이 대단히 선구적이라는 점을 평가했다. 가나가와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대다수가 일본에서 나고 자란 2세와 3세이며, 이들이 말로는 외국인이지만 생활의 기반이 완전히 일본 속에 터한 ‘정주외국인’(定住外國人)이라는 점을 적시하고 이 ‘정주외국인’ 개념을 전면화할 것을 제안했다. 가지무라는 이들을 ‘보이지 않는 외국인’으로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사회의 ‘폐쇄성’이고 민족차별을 통해 ‘동화’를 강요해왔던 점에

20) 김명수 교수와의 인터뷰(2016년 8월 11일, 11:00~13:00, 연세대학교 인근의 某 카페). 김명수 교수는 다른 글에서도 외국인등록원표 샘플링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가나가와현의 섭외부 국제교류과 직원들의 도움으로 이러한 ‘목인’이 가능했다고 말했다(福岡安則·金明秀(1997), 『在日韓國人青年の生活と意識』, 東京大學出版會, 「はじめに」).

21) ‘민제외교’는 일본의 『국제인권협약』 비준(1979) 이후에 제시된 개념이다.

있다고 비판한 뒤, 재일외국인들이 일상생활과 직장에서의 불편을 덜기 위해 통명을 사용하는 개별적인 사례들을 제시했다. 심지어 조사를 시작할 당시 초로에 접어든 한 남성이 조사단에서 보낸 의뢰장을 직접 가지고 사무실에 찾아왔던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이것은 우편이 오가게 되면 주위 사람들의 눈에 띄고 그러면 자신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주변에 알려지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행동이었다. 가지무라는 일본사회에서 ‘귀화’=일본국적의 취득은 미국의 시민권과는 달리 민족의 문화, 가치의 부정, 일본적 가치관으로의 동화를 의미한다는 사실이 지극히 폭력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²²⁾

[연번 6]은 재일외국인 일반의 문제 속에서 재일한인의 문제를 위치 짓고 있다는 점이 여타의 재일한인 조사와는 다른 대단히 이색적인 특징이다. 이 조사를 시원으로, 1980년대 이후 신규이민집단이 일본사회에서 처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의 역사적 전형으로서 재일한인 집단의 경험이 의미화되는 동시에, 에스닉 마이너리티들 간의 연계, 연대의 가능성도 탐문되고 있다. 민투련 운동은 이렇듯 가나가와/가와사키의 자치행정과 결합하였고, 후레아이관(ふれあい館)을 통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일외국인 문제의 일환으로서 재일한인 문제를 해석하고 대처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²³⁾ 이와 관련하여 가나가와/가와사키에서 이루어진 여러 조사들의 질문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통상의 재일한인 조사들에서 한국어/조선어능력을 측정하는 것과는 달리 ‘일본어능력’을 측정한 것이 그것이다. 행정에의 접근을 위해서는 일본어의 구사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 재일한인을 포함하여 재일외국

22) 梶村秀樹(1993), 「定住外国人県民の生活とニーズ: ‘県内在住外国人実態調査’を終えて」, 『梶村秀樹著作集 第6巻: 在日朝鮮人論』, 明石書店(*초출연도는 1986년), pp. 405-408.

23) 梶村秀樹(1993), 『外国籍県民支援の入門講座の手引』. 이 보고서는 1984년에 실시된 재일한국·조선인, 중국인 조사에서 얻어진 정책적 결론 위에서 그 함의를 다국적 이민자 그룹의 지평으로 확대적용하려는 시도였다.

인이 공유할 수 있는 언어도 좋든 싫든 일본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감안된 조사설계로 보인다.²⁴⁾

3.2. 행정조사와 재일한인 파악의 한계: 표본의 문제와 질적 조사로의 전환

[연번 7]은 오사카시에서 가나가와현의 경험을 토대로 조사한 자료로 볼 수 있는데, 재일외국인의 인권문제를 이해한다는 목적 하에 실시되었다. 질문지는 일본인에게 재일한인의 생활실태와 관련지식을 묻는 설문으로 구성되었고, 조사인 동시에 계도적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²⁵⁾

[연번 8]은 생활사 접근법을 표방했다. 생활사연구를 통해 ‘민족’이나 피차별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관찰한 것이다. 이 연구는 오사카시에서 주

24) 여기에는 언어가 비단 커뮤니케이션이나 민족정체성의 구현물일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감안되었다. “1980년대 이후 신규이민의 형태로 일본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이 언어문제 — 일본어구사력 — 는 큰 문제이지만, 재일한국·조선인 중에서도 문자를 읽는 것(識字)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의식되어, 가나가와현의 일본어지도 불문티어 사업에의 관심도 점차 확대되었다.”(神奈川県渉外部國際交流課(1993), 위의 책, p. 10) 한편, 재일외국인 사회조사에서 질문지를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만들어 배포한 사례도 있다. 東京都生活文化局에서 199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가 그것이다. 그 결과는 『東京都在住外國人生活實態調査報告書』(概要版, 1997)로 간행되었다. 16세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의 해당기간에 외국인등록창구에 내방한 이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중국어, 한글, 영어 등 10개의 언어로 작성된 질문지를 준비하여 응답을 얻었다.

25) 일례로, 재일한국·조선인에 대한 설문의 내용은, 취직차별의 사례제시와 인지여부(질문 7), 식민지 지배와 전시강제연행으로 재일한인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인지여부(질문 12), 재일한국·조선인의 대다수가 일본태생의 2, 3세라는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질문 13), 창씨개명에 대한 인지여부(질문 14), 재일한국·조선인의 통명사용의 이유에 대한 인지여부(질문 15), 식민통치 말기의 재일조선인의 참정권 부여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질문 16)를 묻고 있다. 질문문 동시에 사실을 제시하여 ‘각성’ ‘계도’한다는 의미가 담겼음을 알 수 있다.

관한 것인데, 아예 처음부터 양적 사회조사보다는 질적 접근을 지향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재일코리안’이 점점 더 다양한 세부범주를 갖는 개념으로 전환되어가고 있고, 이를 양적 조사만으로는 충실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그것이다.

種別 區別	大阪市、區別外国人登録人口 (平成9(1997)年3月31日現在)		種別 區別	大阪市、區別外国人登録人口 (平成9(1997)年3月31日現在)	
	總 数	韓国及び朝鮮		總 数	韓国及び朝鮮
北 区	3,249	2,028	東 淀 川 区	5,122	4,125
都 島 区	2,583	1,830	東 成 区	8,617	8,177
福 島 区	1,069	723	生 野 区	37,742	37,058
此 花 区	1,376	1,179	旭 区	2,120	1,799
中 央 区	3,599	1,861	城 東 区	4,983	4,347
西 区	2,128	949	鶴 見 区	2,135	1,924
港 区	2,160	1,332	阿 倍 野 区	1,603	1,126
大 正 区	1,547	1,084	住 之 江 区	3,008	2,132
天 王 寺 区	3,173	2,567	住 吉 区	3,644	2,718
浪 速 区	2,907	1,678	東 住 吉 区	2,688	2,242
西 淀 川 区	3,271	2,917	平 野 区	7,763	6,567
淀 川 区	4,848	3,497	西 成 区	8,055	7,165
			計	119,390	101,025

(市民部区政課『区政概要』1997による)

[그림 4] 오사카시에 거주하는 韓國籍, 朝鮮籍 주민의 수.

[出典] 大阪市(1998), 『在日韓國・朝鮮人に対する生活意識調査報告書』, p. 5.

이 도표는 1997년 현재, 오사카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등록인구를 집계한 것이다. 지방정부의 통계자료로서 꽤 세밀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는 귀화자=일본국적취득자는 이 공식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 ‘정주코리안’(영주자격 등을 통해 일본에서의 거주권이 보증된 이들)과 한국본국인(뉴커머) 간의 구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적, 조선적을 가진 이들 가운데 약 80% 이상이 일본국적자(귀화자를 포함)와 통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일한인을 생각할 때 어쩌면 ‘조선계일본인’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 라고 제안하고 있다(5). 재일한인의 존재적 다양화

라는 것이 이 조사가 최종적으로 추구하여 밝혀내고자 하는 목표였던 동시에, 조사가 실천되는 현실의 조건이기도 했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다.²⁶⁾

참고로, 이렇듯 다양화된 재일한인 사회의 조건 속에서 생활사 접근법은 학계에도 두루 활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타니 토미오(谷富夫) 교수의 작업이 대표적이다. 타니 교수는 ‘세대간 생활사법’이라는 방법론을 고안하여, 『民族關係における統合と分離』(편저, 2002), 『民族關係の都市社會學』(2015) 등을 펴낸 바 있다. 그는 자신이 세대간 생활사법을 개발, 채용하게 된 이유로서, “재일조선인만이 아니라 정주외국인 연구에 공통된 한계점은 통계 데이터의 입수가 매우 곤란하다는 점이다. ‘외국인등록원표’를 모집단 설정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국세조사의 국적별 데이터도 이용할 수 없고, 각종 관청통계는 국적별로는 되어있지 않다”²⁷⁾는 점을 언급했다.

4. 총련계열의 사회조사

그렇다면 재일한인 정치단체는 앞에서 언급한 재일한인 사회의 여러 위기의식이나 조사의 한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감당하고 있었을까? 또, 그들이 조사를 통해 발견=재현하고 싶었던 재일한인 사회의 상(像)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우선 조사사례의 수요는 대단히 소수에 그치고 있지만, 총련계열의 사회조사의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자.

26) 이 조사에서 구사된 생활사 접근법은 1994년에 오사카시의 조사에서 한차례 실시된 바 있다. 정주외국인문제연구회에 위탁하여 조사한 것으로서, 그 결과물은 定住外國人問題研究會(1994), 『定住外國人に関する意識調査報告書』로 간행된 바 있다.

27) 谷富夫(2015), 『民族關係の都市社會學』, ミネルバ書房, p. 71.

[표 4] 총련계열의 재일한인 조사

연번	보고서 제목	조사시기	표본구성 및 비교
9	신입생 앙케이트 조사: 「在日2, 3世の今…… - 京都の日本の各大学に入學した同胞學生の祖國・民族觀について」(1977)	1977. 5. 1. ~30.	- 1977년, 교토의 일본 각 대학에 입학한 전 동포학생 - 71/100여 명 (회수율 70%) (*국공립, 사립, 여대, 단기대학 등 모든 대학, 조선적, 한국적은 물론 일본국적(귀화)을 가진 학생도 모두 포함) - 개별면접조사법
10	日本の大学で学ぶ在日同胞朝鮮人學生アンケート調査 (1980)	1979. 5. (하순) ~6. (중순)	- 오사카, 교토, 효고의 대학에 다니는 재일조선인 학생. - 507/620(회수율 81.8%) - 개별면접조사법

[연번 9]는 총련 산하의 학생단체인 유학동²⁸⁾ 교토지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조사이다. 조사의 결과는 『건설자』라는 잡지 제2호에 실렸는데, 『건설자』는 유학동교토의 기관지로서 창간호는 1976년 12월 30일에 발간된 바 있다. 같은 지면에 「신입생활영좌담회」²⁹⁾ 자료도 함께 실렸는데, 전반적인 조사의 취지를 이곳에서도 간취해볼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1970년대 후반은 민족의 신체와 일상의 신체 간의 충돌에 관한 문제의식이 전면에 나온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말(ウリ

28) 在日本朝鮮留學生同盟(留學同): 총련 산하의 재일조선인 대학생 단체. 전신은 종전과 함께 결성된 ‘재일조선학생동맹’이다. 1955년 5월 총련 결성에 즈음한 재일조선인 운동의 노선전환에 따라 1955년 6월의 제4회 임시대회에서 ‘재일본조선유학생동맹’으로 개정하여 총련의 산하단체로 발족하였다. 김일성사상, 조국통일문제,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문제, 인권옹호문제 등을 테마로 토론, 남북한통일운동, 한일회담반대운동,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하였다. 일본의 각 대학에 ‘조선문화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동했고 기관지는 『유학생신문』(조선어 및 일본어판 반월간지)이다.

29) 「座談會: 新入生のトム達を囲んで」(所在: 재일본조선유학생동맹 교토지방본부 『건설자』편집위원회(1977), 「신입생 앙케이트 조사」, 『건설자』 제2호(1977. 7)).

マル)을 배우는 의미에 관한 논의에서 한 신입생 학생은 언어의 내용과 형식 간의 괴리를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저는 ‘임진강’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 노래 속에서 ‘누가 조국을 분단시켰나’라는 대목에서 매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그 감동을 받은 언어는 일본어였고, 그 감동을 전하는 언어도 일본어였습니다. 매우 모순적이라고 생각했고 참 쓸쓸하다고 생각했지요.” 또, 고교까지는 통명을 썼으며 본명을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들의 논의 속에는 조국통일의 실용적 효과도 응시되고 있는데, 중국이 그 좋은 사례로서 제시되었다. “저는 통일이 되면 차별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보면, 전전에는 멸시를 받았지만, 지금은 훌륭한 국가가 되자 누구도 이를 말하지 않잖아요.”([87~89])

유학동교토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재일 2, 3세가 일본사회에 점점 동화되어가고 있고, 특히 민족/조국으로부터 이탈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기초해 있었다. 따라서 조사설계 단계에서부터 민족관과 조국관의 확인이 가장 중요한 질문항목으로 설정되었다. 질문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진학의 이유 (2) 독서경험(특히, ‘조선’ 관련 책의 독서리스트와 건수) (3) 직업과 자격의 차별여부 (4) 장래의 진로³⁰⁾ (5) 대학에서의 공부와 자신의 장래 (6) 재일 ○세인가³¹⁾ (7) 조선인으로서의 의식³²⁾ (8) 차별, 귀화, 국제결혼 (9) 조선어에 대해³³⁾ (10) 조국, 민

30) 재일한인의 경우 자영업 선호가 많고(1위) 회사원은 6위(일본인들에게서는 1위)에 해당된다는 점이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취업차별을 회피, 우회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분석했다([연번 9]: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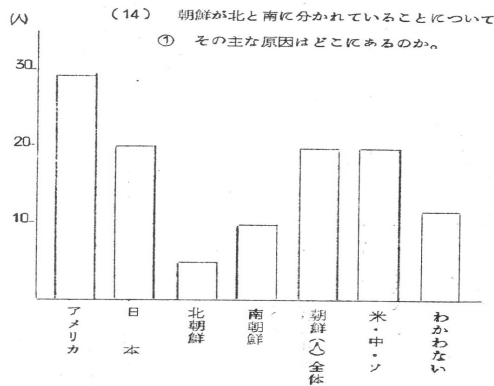
31) 대다수가 2세 또는 2.5세였고 3세는 10% 남짓이었다([연번 9]: [97]).

32) “소학교 이전에 부모로부터 알게 되었을 때는 별다른 인식이 없었지만, 소학교의 고학년, 중고교에서 친구를 통해 알게 되었을 때는 심경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회신이 많았다.”([연번 9]: [98]).

33) “대다수가 ‘초급’ 또는 ‘알지 못함’이고 ‘배움의 유무’는 거의 절반이다. ‘있다’라고 회답한 이의 대부분이 대학에 들어와 留學同 京都의 국어학교에 참가하고서부터 라고 한다.”([연번 9]: [100]).

족에 대하여³⁴⁾ (11) 재일조선인에 대하여 (12) 장래 생활의 장(일본/한반도)은? (13) 조국통일에 대하여 (14) 남북분단의 원인 (15) 재일조선인 운동에 대해 (16) 7.4 남북공동성명 (17) 바람직한 조선인 청년의 상[92~106].

이상의 질문 가운데 특기할 점은 한반도 정치에 관해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4)가 그러한데, 남북한에 대한 이미지, 남북한 지도자에 대한 이미지,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미군철수 문제 등 당시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던졌다. 남북분단의 원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그림 5] 남북분단의 원인.

[出典] 재일본조선유학생동맹 교토지방본부 『건설자』편집위원회(1977), 「신입생 앙케이트 조사, 『건설자』 제2호(1977.7), p. 105.

조사자들은 최종적인 결론으로서, 재일 2, 3세에 대해 ‘동화’ ‘풍화’ 경향이 회자되고 있지만, 이를 조국과 민족으로부터의 이탈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특히 조국통일에 대한 답변은 애초 예상을 훨씬 상회했고,

34) “조국/민족이라고 하면 무엇(어떤 이미지)이 떠오르는가?”는 총련계열 조사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항목이다.

분단의 원인을 미국(アメリカ), 일본 등 ‘외세’에 둔 동시에 미군이 ‘즉시 철수’해야 한다고 본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평가했다([108~110]).³⁵⁾

[연번 10]은 “총련결성 2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조사였다. 각종 세대론, 풍화론, 동화론에 대한 검증을 주요 안건으로 내세웠다. 즉, 조사자들은 “2세와 3세를 ‘조국을 알지 못하면서 在日을 전제로 하여 사는 세대’라고 강조하고 그들의 민족의식의 ‘풍화현상’을 절대시하여 모든 ‘재일조선인문제’를 논하는 그 사대주의적 자세에 대해 강한 의문”([52])을 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연번 9]와 비슷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조국관/민족관의 질문항목에 한국의 미군주둔과 민주화, 그리고 자신과 조국통일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어김없이 포함되었다. 이 질문들에는 ‘동화’와 ‘풍화’ 현상 이면에 미국의 한반도 분열 정책,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동화정책, 남한 정권의 재일동포에 대한 기민정책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또, 표면적으로 관찰되는 ‘귀화’와 ‘국제결혼’의 증가가 필연적으로 2, 3세의 ‘조국/민족 이탈’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선지형 문답이 아니라 기술형, 필기형 문답을 만들기도 했다([53]). [연번 9]와 비교하여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유학동 소속여부가 민족의식의 차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표본을 대조군의 형태로 구성한 점이었다. 설문에 응한 507명의 학생 가운데 유학동 조직에 속한 학생은 203명, 비조직학생은 304명이었다. 조사자들은 이들 간의 응답을 비교하여 제시한 후 최종적으로는, “재일 2, 3세의 민족의식이 자라는 장소는 그들의 가정이나 각 대학에 있는 <조선문제연구회>나 유학동 조직이었다는 사실”이라는 결론

35) 유학동효고지방본부에서 펴낸 『喊聲』을 보면, 5호(1978.7.22. 발행)에 “제3회 재일 동포 건강실태조사”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실려 있다. 8월의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실시될 예정인 이 조사는 “단순히 재일 1세를 중심으로 한 재일조선인의 건강실태를 조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1세의 생활, 의식을 포함한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留學同兵庫地方本部(1978), 『喊聲』 5호, p. 27).

을 내렸다([57]). [연번 9]와 [연번 10]의 사례에서 보건대, 한반도의 정치 상황과 조국통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총련계열 사회조사 전반을 지배하는 분위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필자는 총련계열의 조사는 이후로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었는지에 관해 전혀 정보를 구할 수 없었다. 1990년대 접어들어 총련에서 사회과학 전문가를 위촉하여 본격적인 사회조사를 실시하려는 기획이 있었다는 점이 몇몇 구술자료를 통해 확인은 되지만,³⁶⁾ 그것은 실제로는 성사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총련계열의 조사가 대단히 적은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5. 민단체열의 사회조사

앞에서 분석한 총련계열의 사회조사와 비교할 때, 민단체열의 사회조사는 1980년대 이후로 대단히 활발히 전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예를 들어 1993년에 민단청년회 주관으로 실시된 조사는, 비록 한국적(韓國籍) 청년들에 대한 조사라는 한계는 있지만, 민단이 보유한 명부자료에 기초하여 무작위표본추출(random sampling)을 통해 전국 규모로 체계적인 사회과학적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마이너리티 서베이의 역사 속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조사로 회자되고 있다. 민단체열의 조사는 그 주체의 차원에서 청년상공회(靑商)와 민단청년회, 그리고 기타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36) 1990년대에 민단 청년회의 의뢰를 받아 제일한인 사회에 대한 서베이를 주관했던 김명수 교수는 1993년의 민단의 조사 즈음에, 총련계의 ‘유학동’에서도 마찬가지로의 대대적인 조사가 계획되고 있었고, 사회조사 실무자로 본인이 위촉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상문제’로 섭외단계에서 해촉이 되는 바람에 자신은 민단 쪽의 조사로 선회했다고 밝혔다(김명수 교수와의 인터뷰(2016년 8월 11일, 11:00~13:00, 연세대학교 인근의 某 카페)).

5.1. 靑商 주관 사회조사

[표 5] 민단계열 靑商 주관의 재일한인 사회조사

연번	보고서 제목	조사시기	표본구성 및 비고
11	在日韓國商工人の意識と實態調査(1982)	1982. 9. 1. ~10. 2.	- 도쿄한국청년상공회 주관 - 1,103/1,165(회수율 95%) - 방문개별면담
12	在日韓國商工人の意識と實態調査(1989)	1989. 3. 1. ~5. 31.	- 도쿄한국청년상공회 주관 - 3,119/4000(회수율 80%)
13	在日韓國人の社會成層と社會意識全國調査報告書(1997)	1995. 2. 18. ~1996. 10. 31.	- 在日韓國青年商工人連合會 주관 - 모집단은 20세 이상의 韓國籍 남성 - 민단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국 민등록대상에서 등간격추출법으로 표본 추출 - 899/1,280(회수율 70.2%)

[연번 11]은 1978년에 발족한 도쿄한국청년상공회의 창립 5주년을 기념하여 실시된 조사로, 기관지인 『청상』(1982.12)에 실려 있다. 2, 3세 위주로 재일한인 사회가 재편되고 있다는 점, 일본경제의 침체 속에서 재일동포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더욱 엄혹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 조사의 배경으로 언급되었다. 조사에 참가한 이의 증언에 따르면, 민족금융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상은(商銀)은 좀 더 영세기업 육성에 힘을 다했으면 한다” “일본의 금융기관에 비해 서비스 등이 좀 떨어진다” “거래조건이 맞지 않는다” 등의 절실한 호소가 나왔다. 상공인조사이기 때문에 경영환경과 요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민족금융의 역량부족과 영세기업 대책의 불비(不備)가 주요문제로서 부각되었다.³⁷⁾ 이 조

37) 金勇光, 「期待大きい民族金融機關」(所在: 東京韓國青年商工會(1982), 「在日韓國商工人の意識と實態調査」, 『靑商』(1982.12)).

사는 태생지(일본태생이 67.8%, 본국태생이 32%)와 직업형태(경영자/피고용자)를 비교, 측정의 변수로 삼았다. 질문항목들은 대체로 이 시기에 실시된 다른 조사들과 대동소이하고, 다만 상공인 조사로서 다소 이채를 띠었다. 예를 들어 비경영자(피고용자)의 의식조사 가운데 “동포 상공인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설문이 마련되었는데, 그 장점으로서는 “생동감이 있다”(73.5%), “경영수완이 좋다”(53.5%)는 점이 확인되었고, 단점으로는 “인간성이 훌륭한 인격자가 적다”(64.7%), “공사 구별이 없다”(64.4%)는 것이 지적되었다([67]).

[연번 12]는 [연번 11]의 연장선상에서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실시된 조사이다.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회수된 조사표의 수가 약 3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직세의 강화, 확장을 반영한다. 당시 전국적으로 23개소에 靑商이 존재했고 회원도 1,500명에 달하는 등 3년 전과는 판이한 상황이 되어 있었고, 1988년의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청상들 안에서 열기가 한껏 고무되어 있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10]). 조사결과가 실린 자료의 명칭도 『도쿄한국청년상공회 청상운동 10주년 기념지』로 되어 있는데, 이 점은 전국적 규모의 조직을 통해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도쿄에서 출발한 청상조직은 1981년에 청상연합회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1984년에는 다시 (민단 산하의) 재일한국인상공회연합회의 산하단체로 편성이 되었다. 이러한 조직상의 변화가 사회조사의 실제과정에 투영되었던 셈이다.

5주년 기념조사와 비교하여 새로운 점을 꼽아 본다면, (1) 민단활동에 대한 참가도(단비의 납부, 행사참여도)³⁸⁾와 (2) 민단에 대한 기대사항³⁹⁾을 조사한 것을 들 수 있다([26]~[27]). 또, 조사에 대한 논평⁴⁰⁾에서, (3)

38) 단비납부는 84.1%. 행사참여는 50.7%.

39) 복수응답 조사의 답변에서, 45.4%가 법적지위문제, 41.7%가 생활문제/권익문제. 납북문제(22%), 조총련과의 대화(13%).

40) 徐龍達, 「在日韓國商工人の意識と實態」(所在: 東京韓國青年商工會(1989), 「在

‘정주의국인’ 개념을 전면화하여 ‘공생’을 통해 일본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추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구상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 글에서 서용달은 가와사키시의 후레이이관을 ‘공생’의 구체적 구현체로 평가하고 재일한인 사회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72]),⁴¹⁾ 이 조사의 결과물로서 제시된 ‘청상’의 정의/방향은 “재일한국인으로서 일본땅에서 태어난 집단으로서,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가진 정주한국인 사회를 일본사회 및 국제조류에 조화해가면서 힘차게 추진해가는 청년상공인의 대중단체”였다([138]).

[연번 13]은 청상연합회에서 설립 15주년(청상연합회 설립은 1981년)을 기념하여 실시한 조사로서 스스로를 “청상 주관 제3차 조사”로서 자리매김했다. 이전의 두 조사에 비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을 띠었는데, 그것은 표본의 구성단계에서부터 잘 확인된다. 이 조사는 모집단을 “20세 이상의 한국국민등록에 등재된 직업이 있는 남성”(iii)으로 설정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격론을 거친 산물이었다. 「조사의 목적과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모집단의 설정: 15주년기념사업회의 답신에서 “상공인에 제한하지 말고 전 동포를 대상으로 하자”는 안이 제출되었는데, 이에 대해 격론이 오갔다. 그 쟁점은,
 - (1) “전 동포적 가치”라고 하게 되면 조총련 산하의 동포들도 조사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문제: 명부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총련 조직에 본 사업의 의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력을 얻어야 한다. 조사표의 작성에도 본 회의 의도하는 바와 다른 것으로 흘러갈 수 있다. 민단과 총련 사이에 이런 정도의 친화성은 아직 없다. 이 험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日韓國商工人の意識と實態調査(2次), 『靑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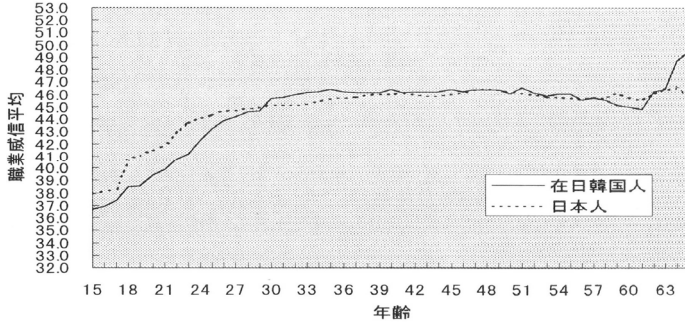
41) 배중도 씨는 필자와의 인터뷰(2018.2.9)에서 민투련의 노선이 민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한 바 있다.

(2) 양성평등의 문제: 여성도 조사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청상의 회원 대부분은 남성이다. 미혼여성 방문조사는 괜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고, 기혼여성은 육아와 가사에 바쁜 주부가 다수이다.

결과적으로 (1)에 대해서는, 조총련 산하 동포 이외에, 민단과 총련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朝鮮籍同胞’가 존재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총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민단명부와 총련명부를 대조하여 중복되어 있는 수를 삭제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불가능하다. (2)에 대해서는, 여성의 조사는 미혼, 기혼, 자녀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 통계학적으로 일반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다. 남성의 특성도 여성과 달라 조사표 설계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번 조사에서는 단념할 수밖에 없다(ii~iii).

게다가 조사기간을 보면 통상의 조사들과는 달리 1년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거기에도 사정이 있었다. 민단이 관리해온 <한국국민등록>의 명부에 기재된 인원을 모집단으로 설정했지만, 실제로 조사를 수행해보니 사망, 전거(轉居) 등으로 부재한 단원의 상황이 정확하게 등록원표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본부가 많았던 것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다시 표본추출(sampling) 작업을 수행했어야 하는 관계로 시간이 지체되고 또 전체적으로 조사표본의 수도 줄어들었다.

이 조사에서 인상적인 점은 재일한인의 교육연한, 취직(직업위신), 세대간계층이동이 일본사회의 그것과 점차 동기화(synchronized)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새롭게 발견한 점이다. 직업위신의 경우 최초의 직장선택에서 재일한인이 열세에 있지만 동포사회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극복해가고 있으며, 자영업 기반의 사업구성이 오히려 세대간계층이동의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그래프이다.



[그림 6] 연령에 따른 직업위신의 변천.

[出典] 在日韓國青年商工人連合會(1997), 『在日韓國人の社會成層と社會意識全國調査報告書』, p. 19.

5.2. 민단청년회 주관 사회조사

[표 6] 민단청년회 주관의 재일한인 사회조사

연번	보고서 제목	조사시기	표본구성 및 비교
14	아버지聞かせてあの日のことを(1988)	1982. 10. 25. ~1983. 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 주관 - 1910~1945년 사이에 일본에 도항해온 자(도항 당시 기준 12세 이상) - 민단에서 보유한 국민등록대에서 표본추출 - 1,106/4,205(회수율 26%)
15	第3次在日韓國人青年意識調査-中間報告書(1994) (*福岡安則・金明秀, 『在日韓國人青年の生活と意識』, 東京大學出版會, 1997로 출간됨)	1993. 6. 31. ~9.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태생의 18~30세 韓國籍 소지자 (*귀화하여 한국적을 상실한 청년, 조선적을 가진 청년은 제외) - 민단청년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명부에서 등간격 무작위추출⁴²⁾ - 자기기입식(自計式) 조사⁴³⁾ - 800/1,723(회수율 46.4%)
16	第4次在日韓國人青年意識調査(2014)	2013. 5. 2.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1/4,000(회수율 12.7%) - 우편조사법

[연번 14]는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운동”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실시된 것으로서, ‘아버지’라는 말처럼 재일 1세들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이를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는 의지 자체는 재일 2세들의 것이었다.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이 문제로 제기되는 국면에서 “(1) 민족사의 계승과 창조, (2) 기성세대의 족적을 통해 청년의 주체의식 환기, (3) 실천과 학습을 통해 간부대열의 강화하기 위해” 이 조사는 기획되었다. 조사의 내용은 피조사자들의 기본속성, 도향상황, 일제의 조선통치정책에 대한 의견, 도일당시의 생활, 해방 이후의 생활, 민족운동에의 참여상황, 민족교육, 귀화와 귀국의 의지, 청년회에 대한 의견 등이었다. 이 조사에서 핵심적으로 제기된 점은 재일 1세의 귀국의지에 관한 것이었다. “현재 귀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귀국할 의사가 없다(44.8%), 귀국하고 싶지만 포기하고 있다(24.8%), 사정이 허락하면 귀국한다(20.9%), 장래 꼭 돌아간다(6.2%), 불명확(3.3%)으로 집계되었다([77]).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는데, 장래 꼭 돌아가겠다는 의견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재로서는’ 귀국이 불투명하거나 아예 할 수 없다는 의견인 것으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정주지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자료 가운데 자유회답을 분석한 김양기는 재일 1세들이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외국인이라는 느낌을 갖는다는 점, 조국과 왕래를 거듭하면서 오히려 조국의 동포들과 커뮤니케이션 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점, 해방 이후에는 76.5%가 귀국을 희망했지만 조사 당시에는 대다수가 실질적인 의미에서 귀국단념자가 되었다는 점, 바로 그런

42) 민단의 명부는 도시부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 성인식을 즈음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서 따라서 20세 부근의 인구에 대한 파악이 가장 정확하고 연령이 상승할수록 오차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43) 조사원이 피조사자에게 질문하여 그 답변을 조사표에 기재하는 방식의 타계식조사(他計式調査)는 개인의 미묘한 의식의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의미에서 전반적으로 재일한인 사회의 ‘정주’(定住)에 관한 아이디어를 민단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한 조사로서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87~90]). 이것은 어쩌면 총련에서 수행한 조사들, 특히 조국지향/본국지향의 강조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한 조사자료가 아니었을까?

다음으로, [연번 15]는 정밀한 사회과학적 조사로서 학계에 정평이 난 조사이다. 이전까지의 재일한인 사회조사는 주로 인권의 견지에서 또 이상적인 동포사회의 상(像)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이었다면, 이 조사는 에스니시티(ethnicity)를 과학적으로 측정해보겠다는 문제의식 위에서 실시된 조사였다. 또, 전국적으로 동포사회의 인원 전체 — 물론 韓國籍에 한정된 근원적인 한계를 안고 있지만 — 를 모집단으로 삼아 무작위추출을 통해 표본을 구성하여 진행한 최초의 조사였다. 그런데 재일한인 사회를 모집단으로 한 무작위표본추출의 가능성, 다시 말해 과학적 사회조사가 성립하기 위해 요청되는 이 조건은 사실은 대단히 이색적이고 예외적인 순간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둘 필요가 있다. 민단이라는 조직이 재일한인 사회에서 가졌던 영향력, 지도력, 역량이 어떤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index, indicator)가 바로 이 표본추출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확인되는 것이다. 민단 역량의 생애사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 조사를 직접 주관한 김명수 교수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1993년 조사의 경우, 한국적(韓國籍)을 가진 사람들을 다 커버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당시 민단은 패스포트(passport)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민단이 주일한국영사관의 여권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했다. 물론 한번 등록을 하면 다시 하는 것은 아니어서, 20세를 즈음해 성인식을 하는 때의 (개인) 정보가 가장 정확하고 그 이후의 연령대에 대해서는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서 여권업무를 영사관으로 되돌린 이후로) 민단에서 여권업무를 하지 않게 되고부터는 정확한 명부를 민단이 보유

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예를 들어, 1993년의 경우 18~30세까지의 명부가 10만 명이었다면, 20년이 지난 2013년의 조사에서는 약 3만 명 정도에 그쳤다. 그것도 2013년에는 18~35세까지로 연령구간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폭으로 축소된 것이다.⁴⁴⁾

현실적으로, 1993년 조사는 재일동포 사회의 세대교체, 3세 청년들에게서 목격되는 ‘조국과의 정신적인 거리의 확대’와 ‘민족에의 열등감’(민족 일원으로서의 자기의 부정)이라는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더구나 1970년대 이후로 일본사회도 국제인권의식의 조류를 받아들여 크게 변화해온 가운데 재일한인 청년층의 조직이탈이 현저해지고 있다는 인식도 자리했다. 재일한인 사회의 민족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보겠다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었다([3]). ‘민족성’ ‘민족정체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1) 제사를 계승하려는 의지 (2) 민족연관 서적의 참조도 (3) 동포 친구와의 교우희망 (4) 동포와의 결혼의지 (5) 동포사회에의 애착도 (6) 민족관련 지식의 획득도 (7) 모국어능력(독해) (8) 모국어능력(회화) (9) 본명의 사용도 (10) 국적을 유지하려는 의지([71]).

이 조사의 결론은 다소 독특한 것이었는데, 통상 ‘동화/반동(reaction)’론에서 민족정체성 형성의 주요 요소로 제시하는 ‘피차별경험의 유무’라는 변수가 실제로는 (그 자체만으로는) 민족정체성 형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 조사의 결과 구래의 ‘민족성’과는 다른 모습의 민족정체성이 재일한인 사회에 구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모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이미 소수가 되었고 민족사에 대한 지식 역시 크게 부족하며 모국에 애착이 별로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민족사회의 구심력이 작동하고 있는 사실에 비춰 볼 때([154~155]), ‘민족성’ ‘민족정체성’이라는 것은 상속되거나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획득’되는 무엇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다시 김명수 교수의 증언이다.

44) 김명수 교수와의 인터뷰(2016년 8월 11일, 11:00~13:00, 연세대학교 인근의某 카페).

피차별체험, 사회계층은 재일코리안의 경우 (민족정체성 형성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두 가지는 일본사회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수동적인 방식의 아이덴티티 형성이라는 발상인데, 1993년 조사에서는 그것은 없었다. 아이덴티티는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측면이 있다. 에스닉 아이덴티티가 하나인 것도 아니다. 적어도 두 가지인데, 첫째 정치의식이나 민족문제에 대한 자각, 민족적 자부심 같은 것과, 둘째 동포사회와 정서적으로 가까워지고 싶든지 동포친구가 좋든지 민족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 다든지 하는 것이 있다. 인지적인 측면에서 배워가면서 획득되는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이다. 민족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강해지는, 민족단체가 주관하는 (민족운동이 아니더라도) 이벤트, 예를 들어 성인식 같은 데에 한번이라도 좋으니까 참여하러 간다는 정도의 아이덴티티. 획득, 그러니까 achievement로서 몸에 익혀지는 측면도 있고……. 아이덴티티에 대한 두 개의 분기를 확인한 것이 93년 조사에서 얻은 중요한 발견이었다.⁴⁵⁾

[연번 16]은 2007년 2월에 채택된 민단 청년회의 “제5선언문”에서 지향된 ‘새로운 가치의 창출’, 구체적으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도전하여 국적의 틀을 넘어 出自를 존중하는 3세·4세에 유연한 재일동포사회를 만들어갈 것을 맹세”한다는 이념 위에서 실시되었다(「まえがき」). 이 조사는 [연번 15]의 조사를 문제의식과 방법론 면에서 계승하여 20년 간의 변화의 추이를 살피고 이를 비교한다는 관점에 섰다. 그러나 이 과제는 그리 녹록한 일만은 아니었다. 우선 현실적으로 이 두 조사 사이에는 급격한 사회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02년 한일공동월드컵, 일본사회에서의 한류붐, 다문화공생의 실천이라는 긍정적인(positive) 측면과, 북한이 납치문제, 2005년의 험한류 의식, 2006년 이후의 재특회(‘재일특권을 용인하지 않는 시민모임’)를 중심으로 한 헤이트스피치 등 부정적인

45) 김명수 교수와의 인터뷰(2016년 8월 11일, 11:00~13:00, 연세대학교 인근의某 카페).

(negative) 측면이 일본사회 및 재일한인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 방법론적으로도 두 조사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존재했다. [연번 16]의 경우, 애초의 조사설계 당시에는 [연번 15]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목적의식이 표명되었지만, 재일한인 사회의 현실 자체가 이미 크게 변한 탓에 그 계획은 좌절되었다. 여기에는 민단 자체의 조직적 역량의 약화라는 현실이 큰 영향을 미쳤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그간 민단은 한국정부의 영사업무(여권발급)를 대행하면서 얻은 자료들을 기초로 한국 국민등록명단의 명부를 작성·유지해왔던 것인데,⁴⁶⁾ 2000년대 접어들어 한국정부가 ‘재일한국인의 여권발급은 한국영사관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민단이 한다’는 방침을 철회했고 2008년 전자여권의 도입으로 민단이 여권업무의 위탁, 중개에 개입하는 것마저도 모두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다. 그 결과, 2013년 시점에서 민단 청년회가 보유한 명부는 2만 명을 하회하고, 명부를 갱신할 기회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정밀도도 크게 저하되었다. 조사의 결과 회답자의 17.1%는 이미 일본국적을 취득한 상태로 밝혀지기도 했다([2~3]).

조사자들은 조사의 수행과정에서 “한국적·조선적을 요건으로 하는 한, 이미 재일한국·조선인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한 시대가 되어 있는 것”([6])을 더 절감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조사자들은 오히려 새로운 개념정립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민단은 (2014년) 지금도 일본적(日本籍)인 이들의 단원자격을 ‘준구성원’으로만

46) ‘한국국민등록명단’이란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관리하는 한국적 주민의 기간데이터베이스의 명칭이다. 가족단위로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미지로서는 일본의 지방공공단체가 관리하는 주민표와 비슷하다. 다만, 주민표는 주민등록에 기초하여 작성되지만, 한국국민등록명단은 재외국민등록이나 여권발급 등의 영사업무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여권발급을 예로 들면, 여권신청 시에 신청자의 가족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론상 ‘재일한국인’이 거의 망라되어 있다. 민단 청년회는 이 가운데 18~30세의 복사한 정보를 기초로 사업을 했고 3차 조사의 시점에는 그 수가 대략 10만 명에 달했다(在日本大韓民國青年會(2014), 『第4次在日韓國人青年意識調査』, p. 2).

인정한다. 그러나 일본국적 보유자도 재일한국·조선인의 주된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7])는 것이었다. ‘민족성’ ‘민족정체성’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면서 1980년대 이후 귀화가 ‘정주화의 편리성’이라는 생활차원의 문제로 전환되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리고 국적으로 한정, 제한되지 않는 전체 재일한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69]).

이외에, 민단에서 실시한 조사로서는 在日本大韓民國民團 在日韓國人意識調査委員會(2001), 『2000年度在日韓國人意識調査中間報告書』와 在日本大韓民國民團·中央民族教育委員會(2008), 『在日同胞の子育て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報告書』가 있다. 전자는 민단이 보유한 명부의 갱신작업을 예비과제로 삼았다. “민단의 국민등록명부 정비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2002년 3월까지 신뢰할 수 있는 국민등록 명부의 정비가 완료될 것이고, 이것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에스닉 마이너리티의 샘플링 대장(臺帳)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 점은 사회조사방법론 상의 의제인 동시에, 재일한인 사회에 대한 민단의 장악 및 조직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매우 흥미로운 언급이 발견되는데, 이 조사의 의의를 설명하는 한 필자는 “이 조사의 대상은 50~60대를 중심으로 자녀교육을 마친 2세와 30~40대를 중심으로 자녀교육 중인 3세로 구분할 수 있다. 다소의 변화가 목격된다. 우선 3세는 2세에 비해 ‘차별’을 느끼는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고 3세의 ‘민족성’이 2세의 그것에 비해 희박화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3세 부모들이 민족학교, 민족교육의 필요성이나 재일코리아안으로서의 에스닉 아이덴티티(민족명, 재일의 역사교육 등)를 중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이 3세들의 새로운 흐름에 맞춰 새로운 민족교육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⁴⁷⁾고 제안하고 있다. 재일한인 사회의 민족

47) 박일, 「양케이트 결과에 관한 분석, 의견」(所在: 在日本大韓民國民團·中央民族教育委員會(2008), 『在日同胞の子育て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報告書』, p. 28).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시간/전통의 지속과 계승이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경험과 계기를 통해 나날이 획득, 갱신되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참고로, (財)世界人權問題研究センター(2000), 『京都市人權問題に関する意識調査報告書』와 アプロ女性實態調査プロジェクト(2005), 『在日朝鮮人女性實態調査』의 보고서도 확인된다. 이 가운데 후자는 재일한인 여성의 삶의 실태를 드러낸 것으로서, 재일한인 가족의 가정내 폭력과 가부장제에 대한 양적, 질적 조사의 결과물을 싣고 있다는 점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단히 이색적인 조사였다.

6. 맺으며: “마이너리티 사회조사(minority survey)는 가능한가?”

1970년대 후반은 일본 국가의 동화정책으로 말미암아 재일한인이 비가시성의 영역에 고착되었던 시대인 동시에, 인구학적으로 1945년 이후 태어나 자란 재일 2세들이 한인사회의 주류가 되면서 언어와 문화에서 재일한인이 ‘비로소’ 보이지 않게 된 시대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 나고 자라 일본의 교육제도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일본인과 국제 결혼을 하는 거대한 인구군이 등장하는 가운데, 일본사회에서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 혈통의식으로 독특한 개성을 뽐내던 재일한인의 존재는 점차 잊혀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재일한인에 관한 사회조사는 이 점증하는 비가시화의 현실적 위기에 맞서 적극적인 가시화를 통해 존재로서의 발언(의제의 구성 및 제기, 자아상의 구축)을 하고자 했던 일련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조사를 통해 일본 국가행정의 여러 사각지대를 드러내어 비판하는 흐름으로도 이어졌다.

한편, 재일한인에 관한 사회조사는 한인사회의 주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민족운동, 사회운동의 핵심세력에 의해 진행되었다. 민단, 총련, 민투

련/혁신자치체 등이 그들이다. 이들에게 사회조사란 모두 재일한인 사회의 구성과 동태, 그리고 변화를 파악하고 이 정보를 통해 한인사회에 대한 장악력의 자원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실천이었다. 이는 재일한인 사회 내에서의 재현경쟁(competition of representation), 또는 헤게모니 기획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조사의 과정은 종종 각 정치세력 별로 재일한인의 개념과 범주, 그리고 경계를 자신의 방식대로 (재)정의하는 실천을 전제, 동반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재일한인 사회조사, 다시 말해 마이너리티 서베이는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 방법론적으로 보다 더 정교해지고 과학적인 형태로 진화되어갔던 것일까? 대단히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가시화의 실천들은 사회조사 본연의 '과학'과 '객관'의 틀을 유지하려하면 할수록, 오히려 좀 더 깊은 비가시성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그 속에서 좌절하는 결과를 맞이했다. 민단이 국민등록 명부의 유지와 갱신에 들인 노력과 정성에도 불구하고 재일한인 사회의 내적 구성이 비가역적으로 변화해가면서 종내 사회조사의 목적 그 자체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 최근의 사태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마이너리티 서베이로서의 재일한인 사회조사는 통상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가시화하고자 하는 실천이자 침묵을 강요하는 권력에 맞서 발언권을 확보하려는 인권정치의 노력이었던 것이며, 나아가 자신이 연구대상으로 삼는 인구집단에 대한 장악력, 헤게모니를 둘러싼 일대 경쟁, 쟁탈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시종 '과학'과 '객관'을 표방했지만 이를 감당할 만큼의 전형성과 대표성은 확보될 수 없었고, 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연구대상의 규모와 경계를 조사개시 이전에 미리 선택하는 정치적 실천을 감행하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 재일한인 사회는 일반적으로 민족아이덴티티의 구성요소로 회자되는 혈연/혼인관계, 전통/문화, 언어/이름, 국적/귀화의 각 경계선을 따라 파편화되고 분절화된 다중사회의 모습으로 현현하고 있다. 재일한

인 단체들은 전반적으로 역량의 약화현상을 보이고 있고 사회조사의 기술적 환경도 표본추출의 난관은 물론 개인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 속에서 점차 더욱 더 녹록치 않은 사업이 되어가고 있다. 가시화를 위한 제도적 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제일한인 사회조사가 맞이한 여러 한계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본사회 속에서 제일한인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발언권을 확보해낸 점, ‘공생’과 ‘연대’의 아이디어를 제기한 점, 활동과 참여를 통해 ‘획득’되는 것으로서 민족아이덴티티를 새롭게 규정한 점 등은 여전히 중요한 성과로서 빛을 발할 것이다.

在日韓國人意識調査サンプル地方別男女比 「表1」

地方名	男		女		小計	有効サマプ ⁷		地方名	男		女		小計	有効サマプ ⁷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男	女			
東京	272	71	343	117	39	大阪	674	223	897	290	136				
神奈川	100	55	155	33	19	兵庫	202	90	292	80	49				
千葉	26	12	38	8	3	京都	182	72	254	70	38				
山梨	6	6	12	3	3	奈良	23	11	34	10	2				
栃木	6	4	10	5	4	滋賀	20	16	36	3	1				
茨城	7	7	14	5	2	和歌山	15	11	26	8	9				
埼玉	24	8	32	12	5	広島	3	11	14	3	5				
西東京	16	31	47	0	0	岡山	17	20	37	3	7				
群馬	4	6	10	1	3	鳥取	5	3	8	1	3				
静岡	17	10	27	10	4	島根	2	2	4	1	2				
長野	15	5	20	8	4	山口	25	34	59	10	20				
新潟	7	3	10	4	3	福岡	52	41	93	30	20				
宮城	13	6	19	5	2	長崎	5	1	6	1	1				
北海道	11	7	18	7	1	佐賀	4	1	5	2	1				
青森	2	3	5	2	2	大分	4	3	7	0	2				
山形	4	0	4	2	0	宮崎	2	1	3	2	1				
岩手	1	3	4	1	4	熊本	4	3	7	5	2				
秋田	4	0	4	3	0	鹿児島	1	0	1	1	0				
福島	5	5	10	1	4	対馬島	0	0	0	0	0				
愛知	122	108	230	40	41	沖繩	2	0	2	2	0				
岐阜	23	19	42	12	8	香川	3	3	6	1	3				
三重	15	14	29	6	8	愛媛	4	4	8	2	3				
石川	3	6	9	3	3	高知	1	3	4	0	3				
福井	15	6	21	3	2	徳島	1	0	1	1	0				
富山	5	2	7	2	2	不明					12				
						合計	1974	950	2924	826	489				

[그림 7] [참고자료] 민단 명부_샘플링 지방별 남녀비율

[出典] 在日本大韓民國民團 在日韓國人意識調査委員會(2001), 『2000年度在日韓國人意識調査中間報告書』.

참고문헌

【자 료】

- 재일본조선유학생동맹 교토지방본부(1977), 『건설자』편집위원회, 「신입생 양
케이트 조사」, 『건설자』 제2호(1977.7).
- 京都大學朝鮮人學生有志(1978), 『隠された人々在日朝鮮人』.
- 洪祥進・中島智子(1980), 「日本の学校に子どもを通わせている在日朝鮮人父
母の教育観に関する調査(最終報告)」, 『在日朝鮮人史研究』 No.7 (1980.12).
- _____ (1979), 「日本の学校に子どもを通わせている在日朝鮮人父
母の教育観に関する調査(中間報告)」, 『在日朝鮮人史研究』 No.5 (1979.12).
- 高同教在日朝鮮人教育研究委員會(1980), 『在日朝鮮人に関する意識調査より』.
日本の大学で学ぶ在日同胞朝鮮人学生アンケート調査実行委員会(1980), 『日
本の大学で学ぶ在日同胞朝鮮人学生アンケート調査』.
- 東京韓國青年商工會(1982), 「在日韓國商工人の意識と實態調査」, 『青商』
(1982.12).
- 神奈川県自治総合研究センター(1984), 『神奈川の韓国・朝鮮人』, 公人社.
- 神奈川県渉外部(1985), 『神奈川県内在住外国人実態調査結果概要:外国人県
民と共に生きるために』.
- 在日本大韓民國青年會(1988), 『아버지聞かせてあの日のことを』.
- 在日韓國人綜合研究委員會(1988), 『在日同胞の生活實態と意識調査(I)』(1988.1).
- 東京韓國青年商工會(1989), 「在日韓國商工人の意識と實態調査(2次)」, 『青
商』(1989).
- 大阪府府民情報室(1991), 『政府モニター・アンケート報告書2: 在日外國人
の人權問題』.
- 在日高麗勞動者聯盟(1992), 『在日朝鮮人の就勞實態調査: 大阪を中心に』,
新幹社.
- 神奈川県渉外部國際交流課(1993), 『外国籍県民支援の入門講座の手引』.
- 在日本大韓民國青年會(1994), 『第3次在日韓國人青年意識調査-中間報告書』
(1994.2).
- 辻本久夫等(1994), 『親と子がみた在日韓国・朝鮮人白書: 在日韓国・朝鮮人

- と日本人の三つの意識調査』, 明石書店.
- 定住外国人問題研究会(1994), 『定住外国人に関する意識調査報告書』.
- 東京都生活文化局(1997), 『東京都在住外国人生活實態調査報告書』(概要版).
- 在日韓國青年商工人連合會(1997), 『在日韓國人の社會成層と社會意識全國調査報告書』.
- 大阪市(1998), 『在日韓國・朝鮮人に対する生活意識調査報告書』.
- (財)世界人權問題研究センター(2000) 『京都市人權問題に関する意識調査報告書』.
- 在日本大韓民國民團 在日韓國人意識調査委員會(2001), 『2000年度在日韓國人意識調査中間報告書』.
- アプロ女性實態調査プロジェクト(2005), 『在日朝鮮人女性實態調査』.
- 京都市(2007), 『京都市外國籍市民意識・實態調査報告書』.
- 在日本大韓民國民團・中央民族教育委員會(2008), 『在日同胞の子育てに関するアンケート調査報告書』.
- 在日本大韓民國青年會(2014), 『第4次在日韓國人青年意識調査』.
- _____ (2014), 『綱領, 規約, 宣言』.

【논저】

- 김인수(2017), 「재일한인 인구 및 실업 통계의 정치적 의미」, 『사회와역사』 113호.
- 조현미(2014), 『자갈투성이의 신작로: 재일한인 2세 배중도의 생애와 민족』, 책과세계.
- 홍성태(2002), 「일본의 혁신자치체, 그 성과와 한계」, 『이론과 실천』 신년호.
- 谷富夫(2015), 『民族關係の都市社會學』, ミネルバ書房.
- 梶村秀樹(1993), 「定住外国人県民の生活とニーズ: ‘県内在住外国人実態調査’を終えて」, 『梶村秀樹著作集 第6巻: 在日朝鮮人論』, 明石書店 (*초출연도는 1986년).
- 福岡安則・金明秀(1997), 『在日韓國人青年の生活と意識』, 東京大學出版會.
- 飛田雄一(2010), 「解題: 民闘連」, 國際高麗學會日本支部『在日コリアン辭典』編輯委員會, 『在日コリアン辭典』, 明石書店.
- 崔勝久(2010), 「解題: 日立就職差別裁判」, 國際高麗學會日本支部『在日コリアン辭典』編輯委員會, 『在日コリアン辭典』, 明石書店.

- Font, Joan and Mónica Méndez (2013), *Surveying Ethnic Minorities and Immigrant Population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 Orlans, Harold (1989), Commentary: The Politics of Minority Statistics, *Society* vol. 26 no. 4, pp. 24-25.

원고 접수일: 2018년 4월 12일

심사 완료일: 2018년 4월 27일

게재 확정일: 2018년 5월 2일

ABSTRACT

Making the Invisible Visible:

The Origin of Social Surveys on Ethnic Koreans in Japan

Kim, In-soo*

Since the 1970s, social surveys on ethnic Koreans in Japan have been a practice whereby those who had become ‘invisible’ in Japanese society are made visible. The non-visualization of ethnic Koreans in Japan was a phenomenon that occurred when the second generation became the mainstream of the Korean community in Japan, and was also the result of the Japanese state’s advocating of assimilation policies.

The findings in this study establish, firstly, that social surveys on ethnic Koreans in Japan represented a conscious practice from the standpoint of human rights, which aimed to reveal a blind spot that Japan’s national administrations had concealed. Secondly, social surveys conducted by *Mindan* (民團), *Jochongnyeon* (總連), and *Mintoren* (民鬪連) represented a practice of hegemony competition in order to get initiatives for the Korean community. Thirdly, the experience of these social surveys can provide many inspirations and theoretical resources for ‘minority survey projects’.

Social surveys on ethnic Koreans in Japan have recently become an increasingly difficult task. However, we should bear in mind the important achievement of such surveys in making the ethnic Korean minority visible, and in bringing up the idea of symbiosis and solidarity in Japan’s society.

* Research Professor, Asia Contents Institute, Konkuk University